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호 2020

e-세계농업

- ❖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 ❖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 ❖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 국제 농업 정보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전남대학교	**김윤형**	교수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담당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	soosuk@krei.re.kr	(Tel. 061-820-2284)
김상현	부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홍예선	연구원	hongye0330@krei.re.kr	(Tel. 061-820-2298)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신 기 석*

건강, 새로운 식품, 그리고 식품체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식품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식품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식품분야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

1 건강과 식습관

1.1. 식생활 습관의 변화

■ EU와 북미의 식량 공급능력과 부담능력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미의 식량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생활의 주안점이 열량 소비 측면에서 벗어나 식품의 품질과 성분에 맞춰짐.

■ 다양한 식품 표시 기준 규정들로 인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확대됨.

- EU와 미국은 식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의 1일 권장섭취량 비율을, 영국과 프랑스는 특정 성분이 과다 함유된 식품의 경우 적색 라벨로 이를 공지하도록 함.

1.2. '건강' 식품의 정의 및 인식 변화

■ '건강' 식품 정의는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라짐.

- 미국의 경우,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등이 1일 권장섭취량 중 최소 10%를 충족하면 건강식품 표시가 가능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총 에너지 섭취량 중 포화지방을 10% 미만, 트랜스 지방을 1%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함.

- 오렌지주스의 경우, 과거 높은 비타민C 함유량으로 질병 회복에 좋은 식품으로 추천되었으나 최근 들어 높은 당 함유량의 문제점에 더욱더 초점이 맞추어짐.

* Virginia Tech University 농업경제학 박사과정(kshin@vt.edu). 이 글은 2019년 IEG Policy Agribusiness Intelligence에서 발행된 "Next Generation Food: How health, climate change and politics are changing the way we eat" 보고서를 번역·정리함.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1.3. 비만과의 전쟁

■ 세계 비만 인구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 2016년 기준,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 중 19억 인구가 과체중이며 이들 중 6억 5,000만 명이 비만으로 조사됨. 현재 세계 비만 인구 비율은 1975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1)]

- EU의 경우, 의료 예산의 대략 7%가 비만과 이와 관련된 질병 문제 해결에 쓰임.

■ 각 국 정부와 식품업계는 법적인 규제와 분야 간 협력 계획을 통해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

- 2016년 기준, 과체중 혹은 비만인 5세 이하 아동은 4,100만 명으로 각 국 정부는 아동에게 건강하지 않은 식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도 이에 동참하고 있음.

1.4. 식품업계 및 정부 기관의 대응

■ 비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 식품의 '저열량' 유형 시장이 성장하고 특정 식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

-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고 고단백질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앳킨스 식이요법이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미국 내에서 파스타(8.2%)와 쌀(4.6%)의 소비 하락을 견인함.

- 2017년 EU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내 평균 설탕 함유량이 2015년 대비 11.9% 줄어듦.

■ 정부 차원에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전략 중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2018년, 기준 세계 35개의 국가, 주 혹은 도시들이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20곳은 2015년 이후에 설탕세를 도입함.

■ 설탕세와 같은 죄악세(sin tax)의 개념과는 반대로 건강식품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건강식품 정의의 어려움, 특정 식품업계 혜택에 관한 공정성, 그리고 예산 확보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1) 세계보건기구(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obesity-and-overweight)(검색일: 2020.02.25.)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2 식품 시장의 변화

■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 및 육류 섭취에 따른 건강 염려로 육류 원산지나 가축의 재배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선진국에서는 육류 소비를 제한 혹은 금지하는 채식주의와 비거니즘(veganism)[2]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

■ 특정 식품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을 의미하는 프리프롬 식품의 세계 매출 규모는 2024년에 3,37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3]

2.1. 채식주의 현황 및 추세

■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 및 비건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미국 내 남성의 4%, 여성의 7%인 대략 1,500만 명의 인구가 채식주의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9년 통계 수치(전체 인구의 3.4%)와 비교해 볼 때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4]

- 영국 내 비건의 숫자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4배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 전체 인구의 2%가 비건인 것으로 조사됨.[5]

■ 육류와 유제품을 배제하며 렌틸이나 병아리콩 등을 사용한 다양한 대체단백질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육류 소비를 절제 혹은 금하는 식생활이 일부 행동주의자들에서 대중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2) 채식주의(vegatarian)는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을 섭취하는 플레시테리언(flexitarian)부터 동물에게서 나온 제품을 섭취 혹은 사용하지 않는 비건(vegan) 등을 포함하는 용어임.
3) 모도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
4) 2014년 채식주의자 비율은 FoE/Heinrich Boll 재단 보고서에 나온 수치이며 2009년 자료는 US 베지테리언리소스그룹(Vegetarian Resource Group) 설문조사 수치로 통계적 오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 점을 감안하고서도 채식주의자의 증가세는 가파른 것으로 보임.
5) 비건소사이어티(Vegan Society); FoE/Heinrich Boll Foundation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2.2. 프리프롬 식품

■ 과거 대비 밀의 높은 글루텐 함량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문제, 낮은 유년기 감염율, 비타민 D 부족 등과 같은 유전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알러지와 식품과민성 반응을 보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EU는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 성분인 14가지(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우유 등)에 대해, 미국은 8가지(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 알러지나 과민성 반응의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 혹은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선호의 이유로 프리프롬 식품이 소비됨.

■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성분을 제외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식품업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루텐프리 제품과 데어리프리 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짐.[6)]

- 미국과 캐나다의 4,400만 인구가 글루텐프리 제품을 소비하며 이 중 55%의 소비자가 식료품 지출의 30% 이상을 글루텐프리 제품에 쓰고 있음.

- 고대종(메밀, 스펠트)을 이용한 밀 생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메밀 시장이 연평균 약 4%씩 성장해 2027년에는 1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두유 혹은 아몬드유가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을 가진 소비자와 젊은층 사이에서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소비가 증가함.

※ 육류프리 제품의 명칭 논쟁

■ 식품 판매량에 있어 용어의 중요성 때문에 기존 식품업계와 대체단백질 혹은 배양육업체 간 '버거', '소세지', '고기'와 같은 용어 사용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임.

-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길러진 가축으로부터 나온 제품이 아닌 경우 '고기'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건 및 배양육 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EU농업위원회는 2019년 4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식 및 비건 식품에 전통적인 고기 관련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6) 퍼시스턴트 마켓 리서치(Persistent Market Research)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2.3. 수퍼푸드(super food) 및 노블푸드(novel food)

■ 과거 소비자들이 맛이나 영양을 중점으로 식품을 선택했다면 최근 들어 식품의 특정 기능 및 안전성을 고려한 식품군이 떠오름.

■ 수퍼푸드는 특정한 영양적 이점으로 건강 효능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가 쉽지 않았던 식품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퀴노아, 고지베리 등이 있음.

■ 식품 가공기술의 발전과 식품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성장 중인 노블푸드는 기존 식용 이력이 없으며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혹은 식품성분을 의미함.

- EU는 「영양 및 건강정보 표시법(Nutrition and Health Claims Regulation)」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미국은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에 의거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관리 감독함.

※ 칸나비디올(cannabidiol)

■ 소위 대마로 불리는 삼(Cannabis sativa L.)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은 정신활성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과 달리 비정신활성물질임. 특히, 카나비스오일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매우 낮아 소비하기에 안전함.

■ 칸나비디올은 수면, 면역반응, 고통완화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체내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의 원활한 작용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불면증 개선 및 진통 완화에 효과적임. 또한 소비자들이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비가 증가함.

■ 미국의 경우, 현행법 상 칸나비디올은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이 나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식품의약국의 칸나비디올 관련 지식(하루 적정섭취량, 다른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이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칸나비디올 함유 제품의 효능을 최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정 근거 마련 및 불법 마약류 생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삼 재배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현재 미국의 40개가 넘는 주가 개별적으로 대마 생산 법규를 시행중인데 미국 농무부는 2020년부터 칸나비디올 관련 법규 시행과 허가제를 통한 생산 통제 계획을 공표함.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4 식품분야의 새로운 과제

■ 유엔 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식품시스템(food system)이 지구 생물다양성 손실의 60%, 온실가스 배출의 24%, 토양 황폐화의 33%, 그리고 상업용 어류 고갈의 61%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농식품업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단기적)와 소비자 단체행동(장기적)이 필요함.

- 식품 원산지 및 생산 정보 그리고 식품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요구됨.

- '가치기반' 식품소비주의에서 중요한 식품표기와 추적가능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증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의 신뢰성 향상이 중요함.

■ 1994년 영국 학계에서 처음으로 쓰이게 된 푸드마일(food mile)이란 개념은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자원 지속성 측면에서, 푸드마일이 낮은 즉, 근접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요구됨.

-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환경적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지중해에서 생산되어 북유럽 국가로 수출되는 토마토의 탄소배출량이 북유럽지역에서 인공적인 열과 빛을 통해 생산되는 토마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음.

■ 유통과정에서 음료업계를 포함한 식품업계의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판매된 플라스틱 병의 절반 이하가 재활용으로 수거되었으나 이중 7%만이 실제로 재활용되며, 미국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양의 6배나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되고 있음.

- EU는 2021년 7월 3일부터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

■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들이 소비의식 개선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하고 올바른 식품 관련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임.

참고문헌

IEG Policy Agribusiness Intelligence. 2019. "Next Generation Food: How health, climate change and politics are changing the way we eat".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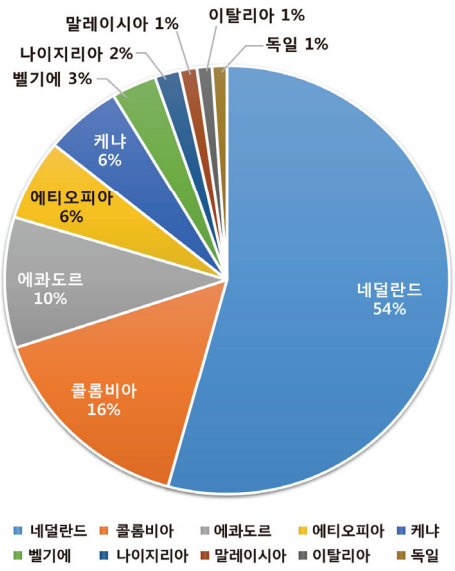
안 규 미 *

기후와 노동력,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성장한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화훼산업은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를 견인, 책임 있는 환경자원 이용, 품질 혁신과 병행한 시장 다변화가 향후 지속가능성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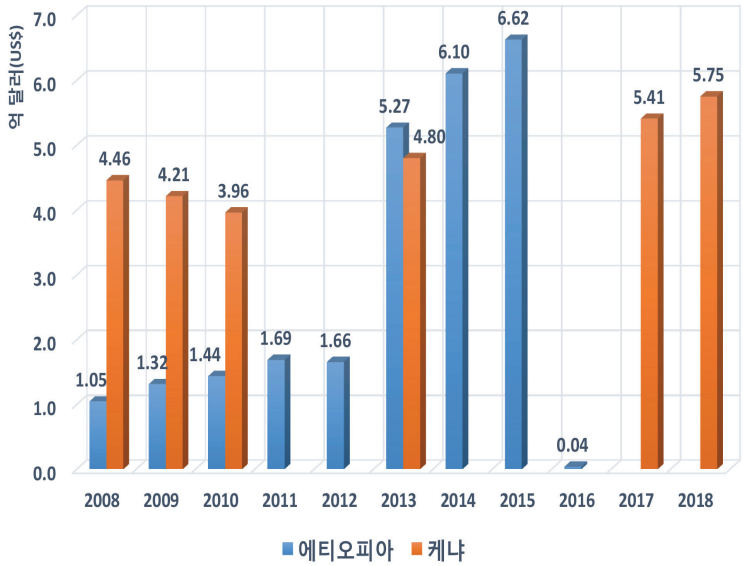
1 생산 및 교역 주요동향

■ 전통적 화훼 생산지역은 장식용 꽃 소비 수요가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남미와 아프리카 등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로 다변화하고 있음. 그 중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에티오피아가 최근 십여 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 이어 세계 주요 화훼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세계 주요 화훼수출국 수출액 비중(2013년) |



| 화훼 수출액 추이 |



자료: Trend Economy(2020).

*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박사과정((k.ahn@ids.ac.uk)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1.1. 케냐

■ 하루 12시간의 일조량, 풍부한 가용 담수, 고양분의 화산 토양 조건을 갖추어 꽃 생산에 유리한 케냐의 화훼산업은 내수보다 수출 목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유럽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국제공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여 농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일반 농업생산자와 달리 수도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기존의 도시민이 다수임.

■ 케냐의 화훼작물 수출량은 1988년 1만 톤에서 2010년 12만 톤, 2017년 15만 톤으로 증가하여 20여 년간 수출가치가 1,200% 성장, 아프리카 최대 화훼수출국으로 발돋움함. 2017년의 케냐 화훼산업 총생산액의 8억 2,300만 달러로 케냐 GDP의 1.1~1.3%를 차지함(Kenya Flower Council).

■ 수출용 꽃 가운데 장미와 카네이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나, 안개꽃, 백합, 알스트로메리아, 스타티스(statice), 국화과의 솔리다고(solidage) 등의 동아프리카 지역 자생종도 북반구 시장으로 수출되며 매년 5월~10월 사이 수출이 가장 활발함(Kenya Flower Council).

■ 케냐산 꽃은 6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전체 수출작물의 절반이 네덜란드 화훼 경매시장을 거쳐 거래되나 최근 경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Veselinovic 2015).

- 유럽연합 화훼시장에서의 점유율은 35%를 상회(네덜란드 66%, 영국 17%, 독일 5%, 기타 12%)함.

■ 연중 생산이 가능하며 수출 수요를 확보한 케냐 화훼업계는 최대 고용 창출 산업의 하나로,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 케냐 화훼업계가 직간접적으로 10~50만 명을 고용하고, 이 중 9만 여명이 전국 총 127개 대형 화훼 농장에 직접 고용됨(Muma 2019).

■ 주요 화훼 농장의 절반이 나이로비 북서부 외곽의 나이바샤 호수 주변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데, 이는 공항과 호수 주변에 위치하여 운송, 저장, 수자원 이용이 용이하며 동 지역에서 장기간 화훼생산이 지속되면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임(Kenya Flower Council). 해발고도가 약 2,000미터에 이르는 이 지역은, 슈퍼마켓을 포함한 유럽 최종 소비시장에 흔히 판매되는 중간 크기의 장미 재배에 특히 유리함.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역은 러시아 시장 수요가 높은 큰 꽃봉오리의 화훼작물 생산에 특화됨(Veselinovic 2015).

■ 1990년대 초부터 케냐 화훼산업은 방대한 인프라와 자재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업화된 소수의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함. 다량의 꽃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필요한 관개시설, 저온창고, 인공조명과 수출에 필요한 선적용 냉장트럭 등의 고비용 시설이 소규모 농가의 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1)]

■ 케냐와 유사한 기후토양 조건을 가진 사하라 이남 주변국의 농가, 기업, 정부가 자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케냐를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케냐 화훼업계가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포함한 인근국의 협력 요청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교류를 추진하며 응답함(Veselinovic 2015).

1.2. 에티오피아

■ 1991년 공산주의 정권 종식 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농축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에서 민간 기업이 부상하고 확장한 가운데, 후발진입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화훼산업은 유례없이 성장해 케냐에 이은 아프리카 제2의 화훼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함(International Trade Center 2015).

■ 시장경제화 초기, 규모를 불문하고 에티오피아 농가들은 상업용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며 내수와 수출 시장에 편입되었고, 이어 장미와 허브류를 포함한 화훼 생산이 크게 확산되면서 2005년 화훼수출액 약 2,000만 달러를 달성하고 불과 십 년 후인 2015년에 6억 6,000만 달러(Trend Economy), 2018년 2억 500만 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출액의 7%를 차지함(Ethiopian Revenues and Customs Authority).

| 에티오피아의 대형 화훼온실 전경과 화훼업계 여성노동자 |

자료: British Journal of Photography (https://www.bjp-online.com/2020/02/adriano-marzi-valentines-day-ethiopia-roses/)

■ 남쪽으로 케냐와 접한 에티오피아는 열대성 기후를 공유하며 고도범주가 다양하여 여러 종의 화훼 작물이 재배되며, 전체 화훼 재배면적은 1만 2,000헥타르를 상회함.

1) 케냐의 화훼 재배 가공 과정과 규모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 영상을 참조 바람.
(https://www.aljazeera.com/news/2019/10/brexit-effect-uk-eu-kenya-flower-farms-191025055300576.html)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 화훼농장들은 해발 약 2,000미터에 이르는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남쪽지역에 다수 분포하며 이 지역 역시 케냐 나이로비 북부와 유사하게 풍부한 수자원과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화훼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 형성. 국제공항 인근지역은 장미재배에 특히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어 1,700헥타르를 이루는 100개 이상의 대형 화훼농장이 집중 분포됨.

■ 18만여 명이 화훼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며 전체 인력의 75%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등 화훼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함.

■ 화훼산업 형성 초기에는 주로 국내기업이 생산 기반을 다졌으나 2000년대 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확대 정책수단으로 인해 점차 다양한 외국기업(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인도, 수단, 나이지리아, 오만 등)이 진출하여 투자함(International Trade Center 2015).

■ 2015년을 전후로 케냐의 정치와 사회에 혼란과 소요가 거듭되면서 케냐에 집중되어 있던 화훼 생산 및 수출 거점을 에티오피아로 다변화한 가운데, 케냐를 포함한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주변국 농장 상당수도 에티오피아 화훼업계 진입함(East African Business Week).

■ 80종 이상의 꽃을 생산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운송이 용이한 유럽으로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와 지역 내의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으로도 수출함.

2 쟁점과 향후 과제

2.1. 수출시장 다각화와 품질 혁신 요구

■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아프리카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수출지역 다각화와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 화훼소비 취향과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 다양화와 품질 혁신을 요구받고 있음(Kenya Flower Council).

■ 케냐의 전체 화훼작물 60% 이상, 에티오피아 장미 80% 이상이 네덜란드 한 국가에 수출되는 등 수출대상국 편중이 심함. 유럽의 정세와 소비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정부의 수출다변화 지원이 필요하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지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과 전략이 검토되고 있음.

- 운송 시간과 과정 단축이 수출상품 품질과 비용의 결정적 요인인바, 나이로비 공항에서의 직항편이 운행되며 꽃 소비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함(Brittany 2016).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 꽃을 대량 수입하는 네덜란드는 수입 꽃을 재가공하고 네덜란드 고유 브랜드와 부가가치를 형성해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화훼산업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비해, 아프리카 화훼산업은 일차상품 수출에 주력하여 부가가치 형성이 더딤. 장기 성장을 위해 자체 가공과 마케팅 기술 개발이 요구됨.

■ 해외 원조와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화훼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개설되고 단위생산비용이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으나, 원조 및 외자 의존도의 점진적 감축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성장기간 생산과 경영관리 훈련을 통한 국내인력의 지식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함.

2.2. 생산과 수출 확대로 인한 환경 영향 검토와 조치 마련

■ 케냐 대형 화훼농장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호수 주변 지역의 수자원 고갈과 오염, 그에 따른 담수어종 위협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호수 주위의 농장들과 수자원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지속가능한 생산과 재생산을 위해 화훼업계의 책임의식과 생태보전 의무 이행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인해 절기별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빈발하면서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화훼생산이 차질을 겪고 지역사회에서 자원 이용권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지역 내 환경운동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산 화훼작물의 주요 수입국인 네덜란드와 타 유럽연합국 또한 생태환경에 친화적인 생산방식 준수와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음(Brittany 2016).

■ 화훼생산지로부터 장거리 운송 빈도가 증가하고 천연서식지와 습지가 파괴되면서 탄소배출량 증가에 뒤따르는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환경 NGO와 기타 자율조직, 국립 환경관리국(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등의 정부기관이 수자원 이용, 폐기, 화학비료 및 살충제 누출 등의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 중임(Muma 2019).

2.3. 농장노동자 처우 개선과 화훼산업의 지역사회 편입

■ 화훼산업 규모 확대와 아프리카 주요 화훼생산국의 평균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훼농장 노동자 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임(IDH 2018).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 기준이 부재한 경우 빈곤선 이하의 임금 지급에 대응할 법적,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함.

아프리카 화훼산업 동향과 과제

- 여성노동자 처우가 특히 열악하며 노동조합 가입이 불허되거나 노골적으로 방해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 온실 내 사용되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상해 위험이 상존함을 고려하여 살충제 살포, 수확, 분류 등의 작업단계마다 적합한 안전장치와 훈련 제공 및 점검이 필요함(Muma 2019).

- 수출주도형으로 발전한 화훼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와 극히 제한적인 지역 내수에 수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상하는 중산층 소비수요 포착과 발굴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Gro Intelligence 2015).

- 입지조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대형농장 중심의 화훼산업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않고 주로 독자적으로 확장, 표면화되는 지역 주민과의 환경적,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 마련과 지역사회 발전과 맞물린 산업 발전 방향 제시가 필요함.

참고문헌

Brittany. 2016. "In Kenya, roses are red but the flower industry is blue over climate change," Harvard Business School Digital Archive. (https://digital.hbs.edu/platform-rctom/submission/in-kenya-roses-are-red-but-the-flower-industry-is-blue-over-climate-change/#.) (검색일: 2020. 2. 5.)

Gro Intelligence. 2015 "East African Floriculture Blossoming," Gro Intelligence. (https://gro-intelligence.com/insights/articles/east-african-floriculture-blossoming). (검색일: 2020. 2. 1.)

IDH. 2018. "East Africa Flower Industry," IDH the sustainable trade initiative. (https://www.idhsustainabletrade.com/publication/east-africa-flower-industry/). (검색일: 2020. 2. 4.)

International Trade Centre. 2015. "Ethiopia cut flower industry's success story," International Trade Centre. (http://www.intracen.org/itc/blogs/market-insder/Ethiopia-cut-flower-industrys-success-story/). (검색일: 2020. 2. 1.)

Muma, Isabella. 2019. "The Growing Flower Industry in Kenya," Inspire Afrika. (http://inspireafrika.com/en/the-growing-flower-industry-in-kenya/). (검색일: 2020. 2. 4.)

Veselinovic, Milena. 2015. "Got roses this Valentine's Day? They probably came from Kenya," CNN. (https://edition.cnn.com/2015/03/16/africa/kenya-flower-industry/index.html). (검색일: 2020. 2. 1.)

참고사이트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 (검색일: 2020. 2. 25.)

British Jounal of Photography (https://www.bjp-online.com) (검색일: 2020. 2. 25.)

Ethiopian Revenues and Customs Authority (http://customs.erca.gov.et/trade) (검색일: 2020. 2. 5.)

East African Business Week (https://www.busiweek.com/) (검색일: 2020. 2. 4.)

Kenya Flower Council (http://kenyaflowercouncil.org/?page_id=92) (검색일: 2020. 2. 4.)

Trend Economy (https://trendeconomy.com/) (검색일: 2020. 2. 1.)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미래정책연구실 *

1 개요

■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배경]**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①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②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③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강화, ④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목적]** 유럽연합이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주요내용

■ **[탄소중립]**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를 발표하였고, 2020년 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2020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함.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 허용 여부는 회원국의 자유에 맡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자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2020.1.29.)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 작성함.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외교] EU는 기후변화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외교·무역·개발협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천명함.

-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녹색 연대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기후 및 환경 이슈를 외교의 중심에 둘 것임을 밝히고 있음.

- 또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가능성에 대해 중국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공정 전환] 유럽연합은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transition)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고, 이러한 전환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한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 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조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음.

- 유럽그린딜 정책으로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정책]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은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을 포함하는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분야별 목표 |

에너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 분야를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건물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물(buildings)을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
교통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를 더 깨끗하고, 더 싸며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

※ 자료: European Commission, “What is the European Green Deal?” (2019.12)

■ [에너지]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기후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유럽은 에너지 효율과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에너지 법규를 2021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후목표를 반영하여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갱신할 계획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건물] 건물은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신·개축은 에너지와 모래, 자갈, 시멘트 등과 같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산업] 새로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유럽연합은 2020년 3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위한 산업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며,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대기·수질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를 이룰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job-intensive economic activity)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sustainable products policy)을 제시하여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의 자원 집약적 분야(resource intense sectors)를 중심으로 재활용(recycle) 이전 단계에서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을 강화하도록 하여, 유럽 시장에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진입을 제한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의 모든 포장(packaging)이 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reusable)하거나 재활용 가능(recyclable)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교통] 교통 분야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유럽그린딜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해양 분야로 배출권거래를 확장하며, 배출권거래에 있어 항공부분에 대한 무상 할당을 줄이고, 도로이용에 비용을 부과(road pricing)하는 등 교통 분야 가격체계가 환경의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2025년까지 제로 배출 및 저 배출 차량(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이 1,3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만 개의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분야]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촉진할 계획임.

- EU집행위원회는 유럽회원국이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농수산업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의 기회를 보장하고,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생물다양성]** 2020년 3월까지 EU 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제시하고, 2020년 10월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목표를 제안할 계획이며,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신 유럽 산림 전략(new EU Forest Strategy)도 논의되고 있음.

■ **[환경보호]** 유럽의 시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수질·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오염 계획(zero-pollu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임.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럽그린딜 정책 |

수질	호수, 강,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과다한 영양염류를 줄이고, 미세플라스틱과 약품 오염을 감축
대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대기질 기준을 평가하고, 깨끗한 공기질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
화학	유해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안 물질을 개발하며, 시장에 판매되는 물질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강화

※ 자료: European Commission. “Eliminating pollution” (2019.12.)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20년 감축 목표 제시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으나, 2030년 감축 목표 제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2020년까지 유엔(UN)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국제법적인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협상과 외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의 리더십을 발휘함.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2015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정책 목표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의 이행 비용이 크게 들 것을 감수하면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될 경우 기존의 법정 계획[1]※인 등을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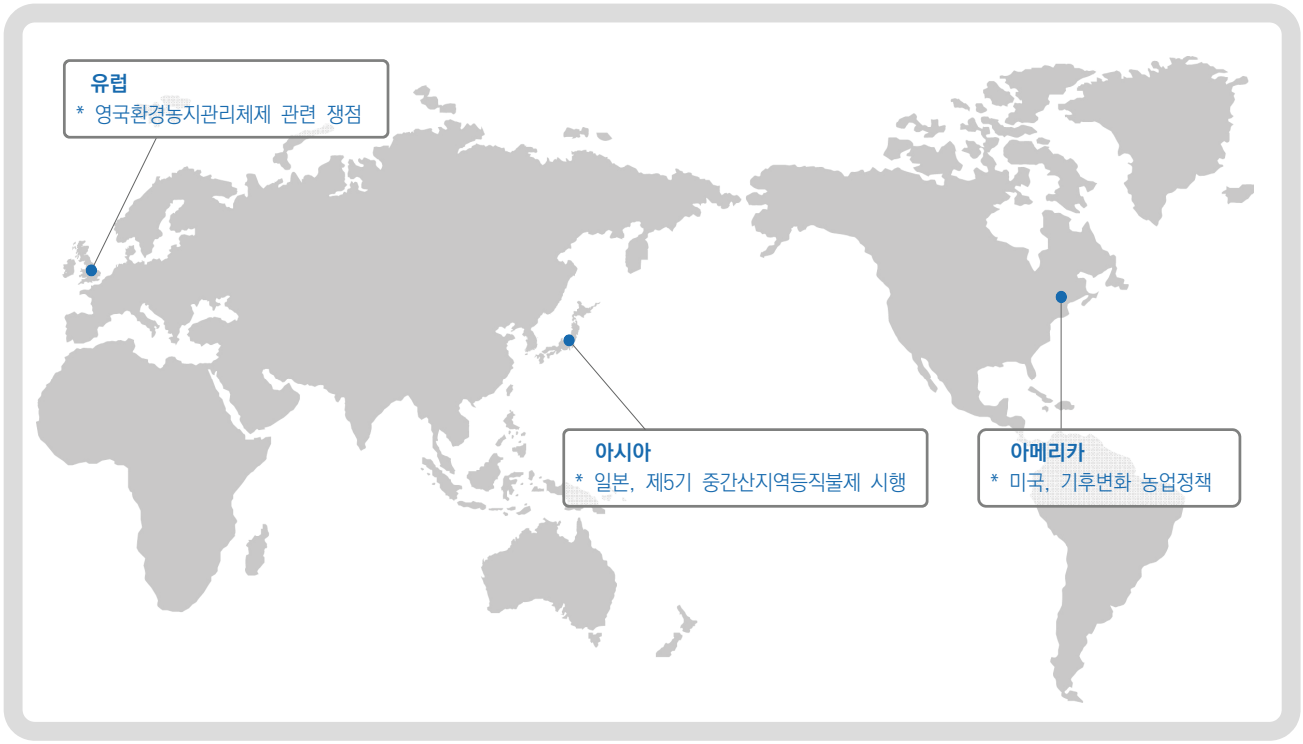
- 국회는 장기목표의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고,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 유럽그린딜은 환경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유럽에 진출하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본격화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10.2.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등임.

국제 농업 정보(2020. 2.)



1 미국, 기후변화 농업정책[1)]

〈기후변화가 농가에 미친 영향〉

■ 미국 남부 지역 농가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음.

- 사우스캐롤리아나주, 조지아주의 복숭아 농가, 플로리다주의 감귤 농가, 조지아주 비달리아의 양파 농가 등은 기록적인 낮은 온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 기후변화의 변동성 확대는 곡물 단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축산농가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미국 농업 경제를 악화시킴.

1) 미국 National Sustainable Agriculture coalition의 "A Call for Climate-focused Agriculture Policy"(2019.11.18)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0. 2.)

〈농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 농업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온실가스, 아산화질소(N2O) 배출로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아산화질소는 토양으로부터 비료나 개간 작업을 통해 배출되는데, 미국환경보건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하면, 2017년 미국 총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74%가 농업 토양으로부터 배출됨.

- 온실가스는 미국의 공장식 밀집 사육(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s)에서 나온 물거름(liquid manure)을 통해 다량 배출됨.

- 또한 토양에 탄소가 다량 저장되어있는 숲이나 초원을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미국 지속가능 농업연맹이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정책 |

1. 농업 기후 중립적 생산을 목표로 한 생산자 지원
2.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향상시키는 요소에 대한 지원 확대
3. 아산화질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영 지원
4. 쓰레기와 유기성 폐기물의 물거름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정책 지원
5. 탄소가 많이 저장된 토양이나 지형을 보호하는 제도 개편
6.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식 밀집 사육에 대한 지원 철폐와 환경친화적인 가축생산시스템 지원
7. 농업 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정책 지원
8. 환경에 민감한 농업에 대한 식물·동물 육종 연구 지원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럽, 영국환경농지관리체제 관련 쟁점[2)]

■ 새로운 영국 농업법안이 2020년 1월 16일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테레사 빌리어스(Theresa Villiers)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올해(2020년) 여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함.

- 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기존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7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024년부터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ELMS)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환경적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할 것임.

- 이번 법안은 주로 직불제 폐지와 EU 탈퇴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014-17년 영국 농가 수익 중 직불금 비중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식품농촌부는 자국 농업인들이 직불제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또한 농업 지원액 규모를 2024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음. 그러나 현재 의회 임기가 끝나면 2025년부터는 지원액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음.

- 2021년에는 기존 수령액이 컸던 농가일수록 수령액 감소율이 클 것으로 보이나,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직불제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음.

- 3만 파운드 이하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5% 감소, 15만 파운드 이상 수령 농가는 지원금이 25% 감소될 예정임.

- 새롭게 시행될 환경농지관리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농지 규모와 지원액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것임. 농업인이 지원액을 자본 투자에 사용할지,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생물다양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경관 개선과 같은 환경농지관리체계 도입 취지는 환영할 만하나 현재 시행 중인 CAP 농촌개발프로그램과 비교 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음. 또한 농업인들이 실제 수령하게 될 금액 수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IEG Policy가 발표한 "Five questions for the UK government as it launches its farm policy gamble"(2020.1.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0. 2.)

3 일본, 제5기 중간산지역등직불제 시행[3)]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부터 중산간지역등직불제 제5기 대책을 시행함.

- 중간산지역등직불제는 경사지가 많아 생산조건이 불리한 농지에서 5년 이상 농업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조건에 따라 교부금이 지급됨. 중산간지역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여 적절한 농업 생산 활동 유지를 통한 다원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간지역 농지 7만 5,000ha의 휴경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임.

- 제5기 대책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뚜렷한 중산간 지역 등에서 농업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2020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261억 엔으로 대상 면적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가 과제임.

■ 현행 기준 휴경지가 발생한 경우, 협약한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직불금 반환을 우려하여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0년부터 규칙을 바꿔 휴경지 면적 분에 한하여 협약체결 시점부터 수령한 직불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

■ 현행 기준 직불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① 농작업위탁 등에 의한 휴경지 발생 방지, 야생동물 대책 등의 농업생산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해당 조건만 이행 시 직불금의 80%만 지급), ② 농기계 공동이용 등 장기적으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정비 활동(해당 조건까지 이행 시 직불금의 100% 지급)의 조건이 있었음.

- 제5기 대책에서는 체제 정비 활동 조건을 6~10년 후 마을 미래상 명확화·공유하는 지역전략을 작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함.

■ 새로운 인력 확보, 영농 이외의 조직과 연계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기능 강화 추가지급금, 농지 단지화·규모화 및 소득향상, 드론을 이용한 약제 살포 등의 노동력 절감기술을 도입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생산성·부가가치향상 추가지급금을 신설하여 각각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함.

3) 일본농업신문 「中山間直払い第５期対策 返還措置の面積緩和 耕作放棄発生分だけ」(2020.1.15.), 일본 농림수산성「中山間地域等直接支払交付金 令和2年度予算概算要求の概要」(검색일, 2020.1.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2020. 2.)

■ 광역 지역협정을 맺어 지역유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집락협정광역 추가지급금조건을 완화함. 복수지역에서 지역협정을 맺는 경우 단위면적당 3,000엔을 지급하며, 계단식 논 지역진흥법의 성립에 따라 지정 계단식 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20.).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세계농업 제1호 (2020. 2.)

발 행 2020년 2월 18일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편 집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